

UR 이후의 국제화 과제

柳 莊 熙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 자료는 지난 8월 26,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최 UR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1. UR의 성패와 우리 경제

UR 협상의 최종타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北美 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에 합의하였고 금년말 완료예정으로서 EC 경제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역외국가들을 차별할 수 있어 다자간교역체제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다자간무역협상의 의미를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NAFTA와 EC 경제통합등 경제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이 GATT 중심의 다자간교역체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바로 이 시점에서 세계전체가 참여하는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UR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UR 협상이 실패할 경우 협상력과 경제

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은 UR 협상에서 다루어졌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 미국, EC, 일본등 선진국들과 雙務協商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EC가 1992년에 경제통합을 이루고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면 이들 경제권과의 쌍무협상은 GATT 다자간협상보다 몇배나 힘들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특히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UR 농산물협상에서 취한 입장을 볼 때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한 북미경제권은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해 올 것이며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등에 대해선 미국과 EC가 공히 쌍무협상을 통해 강한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편 이같은 쌍무협상체제에서는 반덤핑, 섬유, 긴급수입규제 등 우리의 주요관심분야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내 이해집단의 압력으로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UR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는 得보다 失이 많아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두가지 명백한 결론을 도출

해 낼 수 있다. 첫째, UR 협상의 성패와 관계없이 우리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대한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과 둘째, 우리의 협상력등을 고려할 때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만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세계교역질서의 개편 방향이라는 것이다.

2. 우리의 대응과제

이와 같은 결론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대응과제는 첫째, 대외적으로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둘째, 대내적으로는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첫번째 과제는 우리 협상능력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겠으나 우리정부가 EC나 NAFTA에 속하지 않은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및 북구국가들, 스위스 등 다수국가들과 연계하여 UR 협상의 최종타결을 심도있게 촉구하는 운동을 펴 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두번째 과제인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개방확대와 국내제도의 국제규범화를 통상마찰의 완화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소비자 후생의 증대, 독과점의 견제와 그 폐해완화 등을 통하여 원활한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부, 기업, 국민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부는 「市場開放豫始制」를 통해 업계와 국민이 사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세워진 개방계획은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업계의 적극적인 적응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무역정책의 대외공신력을 높혀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무역관련정책 및 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는 작업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우리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절차, 인허가제도를 과감히 완화 또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는 시장개방확대와 제도 및 규제의 개편으로부터 오는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보완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상품교역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서비스교역 등이 폭넓게 자유화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등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업계는 UR 협상을 포함한 최근 국제교역질서 개편 움직임속에서의 우리 현실을 냉철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UR 협상의 진전이 부진함에 위안을 삼거나 정부로 하여금 외국으로 부터의 경쟁을 차단해 줄 것만을 요구해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새기술과 정보의 습득, 신상품의 개발과 품질고급화, 경영의 획기적인 혁신, 선진판매전략 도입과 새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개 경쟁과 공정거래를 우리기업이 추구해야 할 기본목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속에서 일반 국민 또한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하겠다. UR 협상이 농산물시장과 선진국의 관심사항인 서비스시장의 개방만을 다루고 있다는가 UR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인식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초 한국의 무역정책검토를 위해 개최된 GATT 특별이사회에서는 한국이 EC를 단일시장으로 볼 때 GATT 전회원국중 5대 교역국이라는 것이 공식언급되었다. 따라서 우리국민은 이제 한국경제의 국제위상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커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가 불리한 면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다.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 후생 및 사용자의 생산성 증진과 선진국기술이전 혜택,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확대에 따른 섬유를 비롯한 우리 상품 및 서비스 진출기회확대, 쌍무주의를 무기로 한 통상압력의 극복, GATT 규율강화에 따른 반덤핑제도와 GATT 규율권 밖의 灰色規制措置(Grey-Area Measure) 등의 남용방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쟁증대를 통한 당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우리경제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가 금번 UR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국민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하겠다. ♣